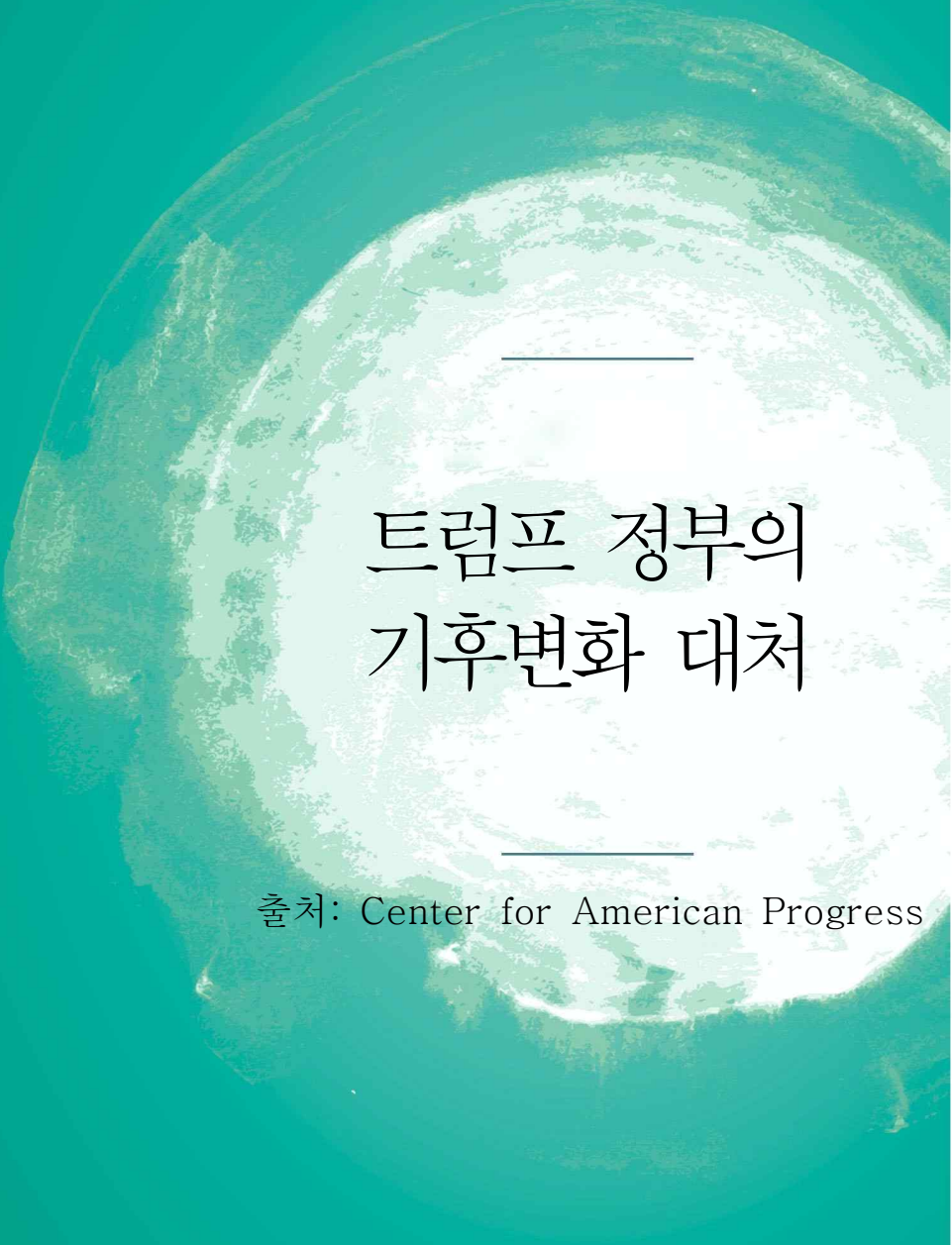


해외보고서 요약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대처

출처: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대처

서론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2016년 미국 대선결과는 매우 절망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뜻을 확고히 밝혔다. 그가 집권한 이후 미국은 석유 수입으로부터의 독립과 탄소 배출 제한의 철폐, 차량 효율성 기준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그의 예산 편성은 과학적인 연구를 크게 저하시킬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는 탄소배출이 기후변화의 주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을 임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반 환경 어젠다는 분명 미래 세대와 지구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위협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극단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 시민들의 행동(citizen activism)이 트럼프 정부의 극단적 정책을 멈추게 할 것이다.

미국 경제의 기후행동 지지

300만 이상의 다수표가 비록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다주지 못했지만 미국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기후변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분석에 따르면 대선 당시의 힐러리 지지주가 미국 경제 수입의 약 64%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11월 대선에서 드러난 미국 경제의 진보세력 지지는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다.

힐러리 지지주의 주지사들은 이미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Battling Climate Change in the Time of Trump

By John D. Podesta March 21, 2017

There is no way to sugarcoat the outcome of the 2016 election for anyone who cares about the health of our planet. President Donald Trump has made clear that he intends to pursue a special interest-driven agenda that would make climate change worse. Since the start of the administration, he has taken steps to increase America's dependence on oil, including forcing oil, climate limits on carbon pollution, and weaken vehicle efficiency standards in the interest of American families. The budget eliminates scientific research and he selected an administrator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r EPA, who insists that carbon pollution is a main cause of climate change.

The Trump administration's anti-environmental agenda is, without question, a grave danger to the health of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and the health of our planet. But this threat alone is no reason to give up hope that we can still avert the most severe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 energy and effectiveness of climate action suggests that the most damaging polici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can be stopped. And, as importantly, a review of the votes cast in the November election and the steps being taken by state and local leaders indicate an alternate path for climate action in the next four years.

The economy is voting for climate action

Winning the popular vote by more than 3 million ballots was not enough for Democrats to win the White House, but these votes nevertheless represent the voice of a majority of Americans. Public opinion research now consistently finds that most Americans believe climate change is a major problem and support steps to cut carbon pollution.¹ What's more, a recent Brookings Institution analysis found that the counties that Hillary Clinton won account for 64 percent of the United States' economic output.²

For those of us craving greenerhouse gas emissions, the fact that nearly two-thirds of the U.S. economy voted for progressive leadership in November is more than significant. Governors of states that voted for Clinton, for example, are already stepping up to the challenge of battling climate change. In January of this year, Gov. Andrew Cuomo (D) of New York called on the states that make up 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1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Battling Climate Change in the Time of Trump

올해 1월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는 2030년까지 2020년 수준의 30% 추가 감축을 위해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Initiative, RGGI)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으며, 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가 배출권거래제 채택과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등의 기후행동의 선두주자로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의 4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한 트럼프 정부가 기후과학 및 연구 분야에 입힌 타격에 대해 비판하며, 캘리포니아 주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했다.

트럼프가 승리한 주의 관료들 역시 기후변화정책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출 이후 71명의 시장이 모여 계속해서 적극적 기후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의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그 중 29명의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된 주 출신이었다.

트럼프 정부의 환경법 철폐 움직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지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아마도 주와 지방정부 차원의 리더십이 일정 기간 동안은 연방정부와의 격차를 해소해줄지도 모른다. 최근 미국 연방 정부는 깨끗한 공기와 물,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는 환경법을 망가뜨리고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적어도 7개 이상의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및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는 환경보호는 커녕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그가 서명하는 안은 훨씬 늘어날 것인데, 그에 따른 행정 조치들은 공유지(public lands)에서의 석탄사용 중지 철폐, 연방 결정과정에서 기후변화 변수 고려 중지, 오염물질 감시 완화 등 결국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폐지하는 데 이를 것이다. 한편, 오염 활동에는 석유 기업으로부터 뇌물 수수 금지 철폐, 독성 폐기물 하천 배출 제한 중지 및 캐나다 역청산 의존성 증가도 포함되어 있다.

○ 돌이킬 수 없는 청정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행보

비록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조치들이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청정에너지 경제는 이미 이러한 단기적 정책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굳건히 펼쳐온 배출 저감 노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미국은 경제 분야의 10% 이상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9%의 탄소 배출 저감을 달성했다. 또한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미국 경제 전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8년과 2015년 사이 미국 풍력 발전능력은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태양열 발전능력(태양열 발전 및 광전지 시스템)은 23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개인 측면에서 볼 때, 주거용 태양열 광전지 시스템 비용이 와트 당 12.34달러에서 4.05달러, 약 3분의 1로 하락했다. 최근 풍력발전은 기존 수력발전을 능가하여 국가의 재생에너지 핵심 발전원으로 부상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연간 에너지 일자리 보고서(U.S.Department of Energy's annual energy jobs report)는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이 약 547,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 태양열 산업이 약 374,000여 명을 고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효율 경제(energy efficiency economy)는 건설업 전문가, 에너지 효율 기기 제조자, 에너지 서비스업자 등 미국 전반의 2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했다. 이러한 성장 산업계의 CEO 혹은 지도자 중 누구도 미국 정부의 화석연료 지지를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오늘날 선진국 혹은 신흥 국가조차도 국가성장을 청정 에너지원에서 찾고 있다. 오바마 전 정부에 의해 체결된 파리협정은 130여 개 이상 국가들이 전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위해 참여한 역사적인 협약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협정에 참가한 국가들이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행보를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모든 국가들이 파리협정 이행을 재확인했으며, 30여 개 이상의 국가가 트럼프 당선 이후 공식적으로 본 협약에 참여했다.

그러므로 미국이 청정에너지로의 전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미 900여 개의 미국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미국과 세계 지도자들이 파리협정과 기후행동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미국이 기후변화 리더십을 중단한다면, 분명 중국 등 이외 국가들이 향후 청정에너지경제의 리더십을 점하려 할 것이다.

늘어나는 저항

미국 대내외적으로 주지사, 시장, 청정에너지 지도자 및 시민들이 기후행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내 공화당 지도자들의 반 환경 어젠다 추진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마다 속한 각 개인들 간의 약속과 적극적인 행동들이 매우 장려된다. 지난 11월 대선에서 소위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은 표심을 나타내는 데 실패했지만, 반면에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하는 그들은 국가의 희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들은 기후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 10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설문조사에서 56세 이상 응답자의 74%만이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35세 이하의 응답자 중 10명 중 9명(약 91%)이 그렇다고 답했다. 하버드 정치연구소(Harvard Institute of Politics)가 실시한 2015년 4월 조사에서도 역시 4명 중 3명의 밀레니엄 세대가 지구온난화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만약 미국의 젊은 세대가 투표권 행사의 영향력을 이해하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것이라는 그들의 결단을 표출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기후 회의론자들은 결국 짧은 역사를 남기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2017년에 있을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시민들의 저항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의 역사적인 선거 이후 민주당이 대부분의 주를 휩쓸었을 때, 버지니아 주에서는 17%의 표차로 공화당 밥 맥도넬(Bob McDonnell)이 선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49.8%의 득표를 얻으면서 트럼프의 44.4%를 누르고 승리했다. 버지니아 주는 미국 생산의 2%를 차지하는 탄광을 보유하며, 미국 석탄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주요 화석연료산업 지역이다.

뉴저지 주에서 역시 힐러리가 55%로, 트럼프 41%와 큰 투표차를 보이며 승리했다. 뉴저지의 경제는 화석연료가 비교적 집중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몇 년 간 더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위 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올해 있을 경선 결과를 통해 워싱턴의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2018년에 있을 미국의회 중간선거의 미리보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연방 및 주 정부의 기후회의론자에게 자신들의 비주류적인 시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시사점

기후정책을 보호하며 도시, 주, 국제적인 차원의 기후행동 진보를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싸움에서 아무도 이해관계를 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는 기후변화를 ‘위협 증폭자(threat multiplier)’ 라고 인정하였으며, 군에 ‘연료라는 사슬로부터의 독립(unleash us from the tether of fuel)’ 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외 국가 정보전문가들 역시 기후변화로 가속화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대표적인 기후 갈등 사례인 시리아 난민 위기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일어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불안정한 환경으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미국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지난 11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연방 정부 차원의 심각한 재정 리스크라고 정의했다.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에 따른 연안지역의 재해복구비용이 2050년까지 190억 달러에서 2075년 500억 달러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무시하고 석유, 가스, 석탄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실일지라도 주 및 도시 지도자, 대학 지도자 및 시민 모두가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의 행보를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동 보고서는 요약 및 번역본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십시오. 원문은 <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green/reports/2017/03/21/428812/battling-climate-change-time-trum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외발간보고서 요약분석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대처

발행일 : 2017년 4월 3일

발행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